

MOST 과학기술부	이 자료는 '05.1.26(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		
	생산일자	'05. 1. 25(화)	
	매 수	총5매(붙임자료 21매 별도)	
	제 공	과학기술부 공보관실	

'05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관련
과학기술부 후속조치 추진
 - 대형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 추진 등 18개 과제 추진 -

- 과학기술부(부총리 겸 장관 오명)는 지난 1월 13일 노무현 대통령께서 발표한 신년기자회견을 분석하여, 이의 실행을 과학기술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발굴하여 추진키로 하였음
-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고용과 성장이 함께 가는 동반성장의 필요성, 대기업·중소기업 및 정규직·비정규직 등의 양극화문제 해소를 언급하셨으며
- 현장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개편 등 대학혁신을 통한 핵심 기술 인력 양성 및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그리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방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셨음
-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05년 국정운영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기술부에서는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대형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 등 18개의 과제를 추진키로 하였음

- 먼저 동반성장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대형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 「연구기획평가사 제도 도입」, 「이공계 전공자 공직진출 확대」, 「공공기관 이공계 전공자 채용목표제」,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 등 6개 과제를 추진키로 하였음
-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은 국민소득 2만불의 선진경제 도약을 위해 5년 이내에 제품화가 가능한 초일류 핵심기술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으로 '03년에 10대 분야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 「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 실용화사업」은 자기부상열차, 고속열차 등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얻은 기술이 실용화 및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지원전략을 수립코자 하는 것임
- 「연구기획평가사제도」는 연구개발의 기획·평가 및 연구관리 분야의 전문자격제도로써 '04년 3월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에 의해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금년중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이공계 전공자 공직진출 확대」를 위해서 '05년에는 4급이상 공무원 중 기술직·이공계의 비율을 25.9%로 확대하고, 5급 신규채용중 기술직 비율은 30.1%로 확대할 계획임
- 또한 「공공기관 이공계 전공자 채용목표제」를 도입을 위해 '05년 상반기 중으로 정부산하기관의 인력통계자료를 조사하고, 이러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채용목표제 대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임

-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는 99개 대상연구기관에 대해 2010년 여성채용비율 20%를 달성하기 위해 기관평가에 여성채용실적을 반영하고, 국책연구과제선정시 여성참여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

-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해 「기술개발단계별 기술금융제도 활성화», 「신기술인증제도 통합·개선»,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 용자지원», 「부품소재 기술개발체제 구축 지원」 등을 추진

- 「기술단계별 기술금융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기술가치평가 전문가 양성, 공시제도 등 금융업계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 기업의 편의성 및 국민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현재 5개 부처의 7개 신기술 인증제도를 통합하여 단순화하는 한편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용자사업으로 '05년 880억원을 지원할 예정임

- 또한 산자부, 정통부 등에서 추진하는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을 심층 검토하여 효율적인 부품소재기술개발체제가 갖추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 출연(연)의 비정규직 문제해소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급여기준을 적정수준으로 상향조정토록 권고하고, 기관평가시 비정규직 해소를 위한 노력을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 대학 혁신 및 핵심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이공계인력의 전주기적 양성·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수요중심 인력공급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고, 지식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서비스업», 「엔지니어링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

- '04. 3월 제정된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라 개별부처별로 시행하던 이공계 인력양성·활용시책을 종합하여 5년 주기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 수요중심의 인력공급체계 강화를 위해 기술분야별, 학위별, 산업분야별 등 다양한 관점에서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실시하고 각 부처의 산학협동활동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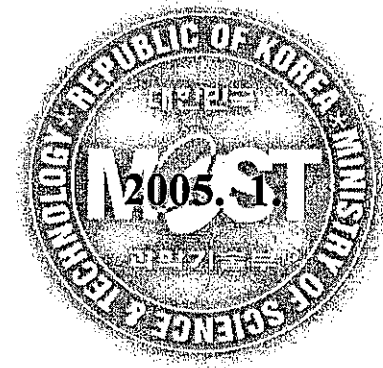
- 또한 기술시장선점과 기술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개발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세제지원 등 제도적 지원책 마련하여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육성하고

- 선진국에 비해 자본 및 기술력이 취약한 엔지니어링산업의 육성을 위해 엔지니어링 핵심공통 기반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선도대형업체의 육성 및 중소기업의 전문화, 계열화를 유도

- 마지막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방형 국가를 선도하기 위해 「해외연구기관 유치», 「EU Framework Program 참여확대», 「한중일 과학기술협력기금설치」 등을 추진

- 범정부차원의 우수연구기관 유치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미국 국립보건원, 러시아 국립광학연구원, 일본 이화학연구소 등을 유치 추진
- '05년 상반기중에 한·EU간 과학협력체결 등을 통해 EU Framework 프로그램 등 국제공동연구프로그램에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 한·중·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지역의 과학기술협력 프로그램 설립 및 기금 마련을 추진할 계획임

‘05년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관련 과기부 후속조치 세부추진계획



붙임 : '05년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관련 과기부 후속조치 세부추진계획

문의 : 과학기술부 정보화법무담당관실 권현준 서기관 (2110-3601)

과 학 기 술 부

목 차

'05년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관련 과기부 후속조치 필요과제			
관련사항	후속조치 필요과제	담당부서	비고
고용과 성장이 함께가는 동반 성장 정책	1. 차세대성장동력 발굴	연구조정총괄담당관	인사위 주관
	2. 대형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	연구조정총괄담당관	
	3. 연구기획평가사제도 도입	과학기술진흥과	
	4. 이공계 전공자 공직진출 확대	인력기획조정과	
	5. 공공기관 이공계 전공자 채용목표제	인력기획조정과	
	6.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	인력기획조정과	
양극화 해소 (기술혁신형 중소 기업 및 부품소재 산업 육성)	7. 기술개발단계별 기술금융제도 활성화	기술혁신제도과	신자부 주관
	8. 신기술인증제도 통합·개선	기술혁신제도과	
	9.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 용자지원	과학기술진흥과	
	10. 부품소재 기술개발체제 구축 지원	기제조재심의관실	
대 학 혁 신 과 핵심기술인력 양성	11. 이공계인력의 전주기적 양성·활용을 위한 기본계획('06-'10) 수립	인력기획조정과	
	12. 수요중심 인력공급체제 강화	인력기획조정과	
근 로 자 간 의 양극화 문제 해소	13. 출연(연) 비정규직 문제 해소	연구조정총괄담당관실 평가정책과	
선진한국을 향한 지식서비스산업 집중 육성	14.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	과학기술진흥과	
	15. 엔지니어링서비스 경쟁력 강화	과학기술진흥과	
개방형 통상 국가를 지향하는 적극적 이 고 능동적인 개방	16. 해외연구기관 유치	미주기술협력과	
	17. EU Framework Program 참여확대	구주기술협력과	
	18. 한중일 과학기술협력기금 설치	동북아기술협력과	

1. 차세대성장동력 발굴	1
2. 대형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	2
3. 연구기획평가사제도 도입	3
4. 이공계 전공자 공직진출 확대	4
5. 공공기관 이공계 전공자 채용목표제	5
6.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	6
7. 기술개발단계별 기술금융제도 활성화	7
8. 신기술인증제도 통합·개선	8
9.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 용자지원	9
10. 부품소재 기술개발체제 구축지원	10
11. 이공계인력의 전주기적 양성·활용을 위한 기본계획('06-'10) 수립	11
12. 수요중심 인력공급체제 강화	12
13. 출연(연) 비정규직 문제 해소	13
14.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	14
15. 엔지니어링서비스 경쟁력 강화	15
16. 해외연구기관 유치	16
17. EU Framework Program 참여확대	17
18. 한중일 과학기술협력기금 설치	18

1. 차세대성장동력 발굴

□ 추진필요성 및 배경

- 대통령 취임사('03.2) 및 참여정부 국정토론회('03.3)시 신산업 성장동력 창출 및 신산업 육성 필요성 제기
- 국민소득 2만불의 선진경제 도약을 위하여 5년 이내에 제품화가 가능한 초일류 핵심기술 발굴, 육성

□ 현황 및 개선사항

- 추진현황
 -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을 확정하고 대통령께 보고('03.8)
 -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별 주관부처·협조부처 확정('03.12)
 - 과기부 장관주재로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단별 사업수행 및 실적에 대한 중간 점검 실시(부총리 주재, 04.7~8)
 - WTO 보조금 협정규정 대응방안 마련(04.8~9)
 -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종합실천계획(안) 수립('04.5~10)
 -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단장 협의회 및 포럼 구성·운영('04.11)
- 현안 및 개선사항
 - 효율적인 민·관 파트너쉽 구축 필요
 - 출자총액예외인정 방안 추진
 - 성과평가를 강화하여 차년도 연구비 배분 반영 추진
 - 사업단 및 연구자간 정보교류 활성화 필요

□ 세부 추진계획 및 일정

- 차세대성장동력사업에 대한 기술개발인력양성 등 정부의 중점 지원분야 추진상황 점검 추진('05. 1~)
- 10대 산업별 포럼 개최 및 기술이전 추진('05. 2~)

2. 대형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

□ 추진필요성 및 배경

-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장기간 대규모의 국가재정이 투입되므로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필요
-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얻은 기술이 실용화 및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전략 수립 필요

□ 현황 및 개선사항

- 추진현황
 - 기초·공공·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 등 관련기관에 1차·2차 수요조사 실시('04.10.4~13/'04.11.12~19)
 -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 추진 기본방향 확정('04.12.21/국가과학기술위원회)
 -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 기본계획(안) 확정('04.12.23/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 과제 관계부처 수요조사 실시('04.12.28~'05.1.15/과학기술혁신본부)
- 현안 및 개선사항
 -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얻은 기술이 실용화 및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전략 수립
 - 기존의 일반예산외에 별도의 재원(예시: 과학기술 채권)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방안 검토

□ 세부 추진계획 및 일정

- 대형국가연구개발실용화사업 타당성 검토대상과제 선정('05.1월)
- 타당성조사, 후보과제 선정, 소관부처 지정('05.상반기)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 착수('05.상반기~)

3. 연구기획평가사 제도 도입

□ 추진필요성 및 배경

- 연구개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객관적·체계적인 기획·평가 및 연구관리의 중요성 증대
- 연구개발서비스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의 기획·평가 및 연구관리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국가자격자가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제도 도입 근거 마련('04. 3월)
- 자격제도 구체적 도입 방안마련을 위한 기획연구추진('04. 12월)
- 연구개발의 기획·평가 및 연구관리 분야에 관한 전문교육 과정 부재

□ 세부 추진계획

-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제도의 구체적 시행 및 활용방안 강구
- 전문기관 지정 및 관련규정 제정

□ 추진일정

- '05. 하반기 : 연구기획평가사의 구체적 자격검정, 관리 및 자격취득자의 활용방안 마련, 관련규정 제정

4 이공계 전공자 공직진출 확대

(중앙인사위원회 주관)

□ 추진필요성 및 배경

-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과학기술적 사고에 바탕을 둔 정책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우수 과학기술 인력 확보의 필요성이 증대
- 이러한 행정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이공계 전공자 공직진출 확대방안」을 의결

□ 현황 및 문제점

- 기술직 인력풀 부족 및 공직분류체계상 문제
 - 5급 이상 기술직 비율이 낮아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인력풀이 부족
 - 현행 공직분류 체계·직제상 기술직의 승진기회 부족
- 기술직 공무원의 임용직위 편중
 - 기획·예산·인사 등 주요 보직이 행정직의 전용 직위로 인식되어 있음

□ 세부 추진계획

- 기술직 신규채용 인원의 확대
 - 5급 기술직 신규채용 확대 계획('08년 40%, '13년 50%)을 추진
- 복수직위 확대 및 4급 이상 직급 통합
 - 4급 직위를 원칙적으로 행정·기술 복수직위로 운영, 3급 이상은 완전 통합, 4급은 서기관·기술서기관으로 직급을 통합

□ 추진일정

- 「4급 이상 기술직·이공계 임용확대 5개년 계획」 추진
 - '02년(기준) 23.8%에서 25.9%로 확대('05년)
- 「5급 신규채용 중 기술직 비율 40% 달성을 위한 연차별 계획」 추진
 - '02년(기준) 23.5%에서 30.1%로 확대('05년)

5. 공공기관 이공계 전공자 채용목표제

□ 추진필요성 및 배경

- 이공계 인력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있어서 국부창출을 위한 핵심자원임
 - 이공계 인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수 학생들이 이공계를 기피
- 이공계 전공자 취업 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우수 인력의 이공계 기피는 취업여건이 좋지 못한 상황에 기인함
 - 공학계열 및 이학계열 전공자의 실업률은 각각 약 9.8%, 8.2%로 전체 평균 6.8%를 크게 상회(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3)
- 제도 검토 대상 420개 정부산하기관의 인력 통계자료 미비

□ 세부 추진계획

- 관련부처의 협조를 받아 정부산하기관의 인력 통계자료(직원수, 이공계 비율, 신규채용 현황 등)를 조사
 -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채용목표제 대상기관 선정
- 「이공계 전공자 채용목표제」 도입

□ 추진일정

- '05. 1. 정부산하기관의 인력 통계 자료 조사
- '05. 1~2. 「이공계 전공자 채용목표제」 시안 작성
- '05. 1~2. 관계부처 협의
- '05. 2~3.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보고

※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상정 · 확정 후 각 부처별 시행

6.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

□ 추진필요성 및 배경

- 21세기는 과학기술경쟁력이 국부의 창출근원이자 국가경제 성장의 핵심동력이므로, 과학기술계의 우수 여성인력이 적극 활용되도록 국가가 한시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이 증대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본회의에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 '03년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보고('04.7.28)
 - 99개 기관의 '03년 채용비율은 18.2%(전년대비 증가율:3.4%)

구 분	2002년			2003년	
	여성과학기술인	여성연구원		여성과학기술인	여성연구원
99개 대상연구기관	17.6%	16.9%	→	18.2%	17.4%
·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	11.6%	10.7%		10.4%	10.5%
· 74개 확대시행 연구기관	32.6%	33.8%		36.6%	35.0%

※ 여성과학기술인 = 여성연구원 + 여성기술직

- 대상기관의 목표비율 달성이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채용실적이 저조한 기관에 대한 정책구속력이 미약
 - 목표비율 : 2010년 20%, 최종적으로 30% 목표

□ 세부 추진계획

- 지속적인 채용목표제 이행점검과 국과위 보고
- 평가에 반영하고 인센티브 부여 등 유인책을 강구
 - 기관평가에 채용실적을 반영하고, 국책연구과제 선정시 여성 참여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

□ 추진일정

- 05. 1~3. 전년도 채용실적과 금년도 채용계획 실태조사
- 05. 4~6. 인센티브 부여방안 강구 및 관계부처와 협의
- 05. 7~ 국과위에 추진결과 보고 및 관계기관에 협조요청

7. 기술단계별 기술금융제도 활성화

□ 현안과 문제점

- 기술금융이 성장·성숙 단계에 편중되어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의 사업화에 대한 지원 부족
- 기술가치평가의 신뢰도가 낮아 투자와 기술담보대출 등 기술금융과의 연계성 취약

□ 개선방향

- 창업과 사업화 초기단계에 적합하도록 투자조건을 개선하고 지원자금 확대
- 기술가치평가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술금융의 활용도 강화

□ 세부추진계획

- 기술가치평가 전문가를 양성하고 공시제도를 도입하며 금융업계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도입

□ 추진일정

- '05. 3. 세부추진계획의 달성을 위한 정책 과제 발굴
- '05. 9. 개선 착수 및 부처간 협의 진행
- '05.12. 개선방안 수립 및 제도화

8. 신기술 인증제도 통합·개선

□ 추진필요성 및 배경

- 기업의 편의성 도모 및 국민의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해 각 부처에 혼재되어 있는 인증제도 통합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민간의 기술혁신 역량 증대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기술에 대한 인증제도와 지원시책을 운영
 - ※ 대표적 인증제도는 5개 부처의 7개 제도(KT, NT, EM, EEC, IT, ET, CT)
- 문제점
 - 각 부처에 유사한 인증마크가 분산되어 있어 국민과 구매자의 인지도가 낮으며, 기업도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함

□ 세부 추진계획

- 신기술 인증제도의 통합운영
 - 현재 7개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인증제도를 단순화
- 지원체계 및 인증절차의 개선
 - 관련부처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통합인증요령 마련
- 기타 신기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 추진일정

- '05. 1~2월 : 인증마크 도안, 통합인증요령 마련
- '05. 7월 : 관련 법령 개정,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 ※ '06년부터 개선된 신기술 인증제도 적용 추진

9.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 용자지원

□ 추진필요성 및 배경

- 중소·벤처기업에 연구개발 용자지원을 통한 연구개발 기반 조성 확대 및 과학기술진흥 필요
- 최근 경기불황으로 위축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용자지원으로 고용창출 및 기업경쟁력 강화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물적 담보력이 취약한 기술 집약형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임
- 보유 기술력을 평가하여 기술력을 담보로 연구개발 용자지원

□ 세부 추진계획

- 용자지원사업 규모
 - '05년도 880억원(일반대출 350억원, 기술담보 대출 530억원)
- 지원대상 사업 및 대상기업
 - 국가적인 연구개발사업, 미래유망기술분야의 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하는 민간기업
- 용자조건
 - 동일사업 당 20억원 이내, 동일기업 당 60억원 이내에서 지원
 - 용자금리는 재정용자특별회계금리와 연계 시행

□ 추진일정

- '05.1월 : '05년도 연구개발용자사업 시행계획(안) 수립 및 공고
- '05.1~12월 : 과학기술진흥기금 취급 금융기관을 통한 용자신청서 접수(연중 수시), 용자심사·기술력평가 후 용자지원

10. 부품소재 기술개발체제 구축지원

(산업자원부 주관)

□ 추진필요성 및 배경

- 세계적으로 완제품의 조립생산 능력이 평준화되면서 부품·소재 산업이 기업 및 산업경쟁력의 핵심으로 등장
- 완제품 생산원가와 부가가치의 60% 이상을 부품·소재가 차지
- 고용있는 성장 달성을 위해서는 부품·소재산업의 육성이 시급
- 전실한 무역흑자 기조의 정착을 위해서는 부품소재 육성이 핵심

□ 현황 및 문제점

- 부품·소재산업은 전체 제조업 생산액의 38%, 종사자의 46.3%, 수출입의 40% 이상을 점유하는 국내 제조업의 중추
- 부품·소재의 기술수준은 현재 선진국 대비 78.8%에 불과하여 원천기술이 포함된 첨단 부품·소재는 수입에 의존
 - * 선진국 100 기준으로 생산기술 82, 설계기술 79, 신제품개발기술 77
 - *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5대 IT산업은 첨단 부품·소재 65%를 수입에 의존
- 반면 첨단 부품·소재의 기술력 취약으로 대일무역수지 적자는 지속되는 추세
 - * 對日적자(억불) : ('01)△103 → ('02)△118 → ('03)△139 → ('04.1-10월)△130
 - * 지난 10년간('93'03년) 부품·소재 대일적자 누계 : 1,020억불

□ 세부 추진계획

- 산자부의 「부품·소재산업 발전전략」 중 10대 전략 부품·소재의 원천 기술과 기술개발 50개 품목에 대한 기술개발체제 및 예산 심층 검토
- 정통부의 IT핵심부품 육성방안과 과기부의 NT분야 소재의 발전계획 검토 및 적정 소요재원 검토

□ 추진일정

- '05. 2 관련부처의 제출자료에 의한 검토 착수
- '05. 3~5 각부처 부품·소재의 예산요구에 대한 전문가 위원회 등을 구성 운영하여 예산투자액 확정

11. 이공계인력의 전주기적 양성·활용을 위한 기본계획('06~'10) 수립

□ 추진필요성 및 배경

- 개별부처별로 시행하던 이공계 인력 양성·활용시책을 종합조정, 국가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04.3제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주기 기본계획을 수립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그동안 개별부처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소관분야별로 이공계 인력양성시책 마련
 - 인력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04.3)」 및 시행령('04.12) 제정
- 문제점
 - 부처별 소관분야 인력양성 관련 시책과 사업의 분산 추진으로 정책의 중복성 및 효율성 저하

□ 세부 추진계획

- 기본계획 작성지침 마련
- 관계기관 시책 종합·조정 및 협의
- 기본계획(안) 수립하여 인적자원개발회의, 국과위 상정 확정

□ 추진일정

- '05. 3. 기본계획 작성지침 마련
- '05. 5~7. 관계기관 협의 및 기본계획(안) 작성
- '05. 8~9. 기본계획(안) 인적자원개발회의, 국과위 상정 확정

12. 수요 중심의 인력공급체계 강화

□ 추진필요성 및 배경

- 이공계인력의 현장적응성과 질적수준을 제고하고, 분야별로 필요한 인력을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인력 공급체계 확립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이공계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전망의 주기적 실시와 산학연관 공동의 인적자원개발협의체(Sector Council) 운영 등을 통하여 분야별 인력수급방안 추진중
- 그러나, 전반적으로 수요중심의 인력양성·활용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
 - 신입사원이 대학에서 습득한 지식기술은 기업 필요수준의 26% 수준에 불과한 실정(전경련, 2002년 12월)

□ 세부 추진계획

- 수요 중심으로 이공계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실시
 - 기술분야별, 학위별, 산업분야별 종합적 인력수급 전망 실시
- 산학협동, 기업체 인턴제, 이공계 산업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대 지원 등

□ 추진일정

- '05. 1.~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등 운영
- '05. 3~9. 이공계 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실시
- '05.10.~ 이공계 산업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추진

13. 출연(연) 비정규직 문제 해소

□ 추진필요성 및 배경

- IMF 이후 사회 전분야에서 적극적인 경영효율화 추진
 - 외부인력을 활용함에 따라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
- 비정규직의 증가는 사회문제로 대두

□ 현황 및 개선사항

- 출연(연) 총연구인력 13,910명중 비정규직은 5,576명(40.1%) ('04.1월 현재)
 - 연구연수(2,491명) : Post-Doc, 인턴연구원, 석사후 연수
 - 단기·특수 목적(2,191명) : 초빙/위촉연구원
 - 상근계약직(894명) : 계약직 연구원 등
- ※ 이중 Post-Doc, 위촉연구원은 엄밀한 의미의 비정규직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순수 비정규직(상근계약직 894명)은 총연구인력의 10.7% 수준
- 출연(연) 비정규직 보수 현황
 - 계약직 연구원: 정규직원과 비슷(정규직원의 80-100%)
 - Post-Doc.: 월 130-200만원 수준
 - 초빙연구원: 월 80-120만원으로 정규직원의 50-60% 수준
 - 석·박사 연구학생: 수십만원~최대 80만원

□ 세부 추진계획(안)

- 출연(연) 「비정규직 급여기준」을 적정수준으로 상향조정 권고
- 출연(연) 기관평가지 평가지표로 반영하여 비정규직 문제 해소

□ 추진일정

- 2005. 5. 기관평가제도 개선시 평가지표로 반영
- 2005년말 기관평가지 적용

14.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

□ 추진필요성 및 배경

- 연구개발서비스업은 서비스 시장개방에 대비하고, 기술시장 선점과 기술개발의 효율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 따라서 연구개발능력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한 새로운 연구개발지원체계의 구축이 절실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정의 및 육성·지원 근거마련('04. 3월)
-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서비스업은 아직 태동단계
 -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일부 담당하고 있으나 전체 기업부설연구소의 3%에 불과하고 규모도 영세
- 연구개발서비스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미흡
 - 민간기업형태의 연구개발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 등 제도적 지원책 미흡
- 우수인력의 확보가 어렵고, 경영컨설팅 전문가가 R&D컨설팅을 병행하는 등 전문성 부족

□ 세부 추진계획

- 실태조사를 통해 특성을 반영한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반영 및 지원방안 강구

□ 추진일정

- '05. 2월~6월 : 연구개발서비스업 실태조사 및 통계시스템 구축
- '05. 12월 : 조세지원 등 지원방안 마련

15. 엔지니어링서비스 경쟁력 강화

□ 추진필요성 및 배경

- 엔지니어링산업은 두뇌집약적 고부가가치 지식창출산업으로 국가기술경쟁력 확보가 필수적
- FTA 등 개방화에 따른 국내산업 육성과 관련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경쟁력강화가 필수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국내 엔지니어링산업은 선진국에 비하여 자본 및 기술력취약
 - 국내시장규모축소에 따라 업체간 경쟁심화
- 문제점
 - 업계의 영세성과 제한된 시장규모
 - 기술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미흡
 - 고급인력 부족과 전문인력 양성체계 미흡

□ 세부 추진계획

- 국내 기술경쟁력향상을 위한 엔지니어링 R&D 지원 확대
 - 「엔지니어링핵심공통기반기술개발사업」의 지속적 추진
- 선도 대형업체의 육성·지원
- 엔지니어링 고급인력 양성 및 교육인프라 구축

□ 추진일정

- 2005. 2월 : 2005년도 엔지니어링기술진흥시행계획 수립
- 2005. 6월 : 선도 대형업체의 육성과 중소기업체의 전문화/계열화
- 2005. 11월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종합정비방안 수립

16. 해외연구기관유치

□ 추진필요성 및 배경

- 세계 일류의 해외 연구기관을 국내에 유치함으로써 창조형 국가혁신체제 및 동북아 R&D 허브 구축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유치 전담조직(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설립·운영
 - 세계정상급 연구기관인 한국파스퇴르연구소(IP-Korea) 유치('04.4)
 - 나노전자·광물리학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의 카벤디쉬연구소 유치('04.11)
 - 러시아 국립광학연구원/전기(연)('04.9), KIST/듀폰('04.10) 공동 R&D센터 MOU 체결
- 문제점
 - 관계부처간의 정보교류 및 범정부 차원의 종합지원체제 강화 필요

□ 세부 추진계획

- IT, BT 등 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R&D센터를 유치하여 성과 확산
- 해외 R&D센터 유치수단 확충 및 홍보 강화

□ 추진일정

- 범정부 차원의 우수연구기관 유치 지원 수단 및 시책 마련 등 유치여건 확충('05.3)
- 미국립보건원, 러시아 국립광학연구원, 일리화학연구소유치 추진('05.6)
- 새로운 유치대상 연구기관 지속적 발굴
 - 발굴된 기관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협력활동 전개
 - 각종 국제회의 참가와 연계, 우수기관 유치 홍보

17. EU Framework Program 참여확대

□ 추진필요성 및 배경

- EU는 회원국내 연구자원의 효율적 활용, 연구개발투자 확대,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범 유럽차원에서 1980년대부터 Framework Program사업을 추진(1차~5차에 걸쳐 431억 유로지원)
- 2000년부터 「유럽연구개발연합체:ERA」를 새롭게 설정하고 핵심과제 실행을 위하여 EU예산의 4%인 175억 유로를 제6차 EU FP사업 (Research Framework Program)에 투입하고 있으며, 향후 제7차 FP(2007-2010)에는 약 400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으로 보도되고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제5차 FP참여('99년 설명회 참가, 1개 과제 지원(해양분야))
 - 제6차 FP참여('02년 국내설명회 개최, '03년 4개 과제 지원)
- 문제점
 - EU와의 공동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비 지원절차 재설정 필요
 - ※ 예 : 국제화사업내에 EU FP 사업 참여를 위한 별도 프로그램 설치
 - EU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국내 홍보 강화 필요

□ 세부 추진계획

- 한·EU 과기협력협정 체결('05년 예정) 문안작성시 한국의 EU FP참여에 대한 특혜조건 확보
- 제7차 FP참여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추진일정

- '05. 상반기 : 한·EU 과기협력협정 체결 실무회의 개최
- '05. 하반기 : 제7차 FP참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18. 한·중·일 과학기술협력기금 설치

□ 추진필요성 및 배경

-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지역은 미국, EU지역과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으로 부상
 - 동북아지역은 전세계 교역액의 30%, 세계 GDP의 22%를 차지하는 거대시장
- 동북아지역의 경제적 기회를 활용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역내 국가간의 상호 보완적 분업체제 구축이 요구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한중일 과학기술국장회의가 정례적으로 개최중이나 동북아 지역의 과학기술협력사업을 총괄·지원할 고위급 협의체 부재
 - 한중일 과학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산 마련 필요
- 문제점
 - 양자간 협력사업이 아닌 중국, 일본 등 3자간 협력사업으로서 중간자적 입장 유지 필요

□ 세부 추진계획

- 한·중·일 과학기술장관회의 개최
 - 한·중·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지역의 과학기술협력 사업을 총괄·지원할 과학기술협력회의 개최
- 한·중·일 과학기술협력프로그램 설립 및 기금 마련
 - 기상, 환경, 급성 전염병 등 공통 관심분야 공동연구, 인력 교류, 대형연구시설 공동활용 및 학술행사 개최 등

□ 추진일정

- 한·중·일 과학기술 실무회의 개최('05년 1월)
- 제1차 한중일 과학기술장관회의 개최('05년 상반기, 제주)
 - 한·중·일 과학기술협력기금 설치 협의
 -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한·중·일 과학기술포럼 병행 개최